## 월요광장

# 이것이 인간인가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얼마 전까지 '괴물'은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로스다. 크레타 왕비의 부정으로 생겨난 미노타우로스는 반은 사람, 반은 황소의 형상을 한 괴물이다. 크레타의 왕은 이 괴물을 한 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올 수 없는 미궁 안에 가두고 아테네의 젊은 남녀를 공물로 받쳤다. 사람을 잡아먹고 거대해진 괴물은 갈수록 난폭해져서 그 횡포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 괴물은 더 큰 희생을 막으려는 아테네의 영웅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로 속의 괴물보다 더 끔찍한 괴물들이 우리 곁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얼굴과 이름으로 버젓이 함께 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어른'으로 대접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자', '원로', '거물'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수식되면서 말이다. 이들이 미궁 속에서 사람 공양을 받던 그 끔찍한 미노타우로스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설명할 길이 없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괴물들의 끔찍한 실체를 한 작가의 증언을 통해 다시 새긴다.

프리모 레비(1919-1987)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이자 과학자인 그가 겪은 괴물은 독일의 나치라고 불리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포로수용소 중 가장 잔혹한 '아우슈비츠'에 보내졌다가 살아남는다. 살아남았기에 어쩌면 더 잔인한 운명을 견뎌야 하는 '생존자'가 되었다.

그는 생존자의 책무를 포로수용소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러나 버젓이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고 인간 모두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세상에 괴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는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수용소 체제를 향해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해도 권력이 비대해지고 기만과 억압 체계가 교묘하게 작동되는 곳에는 어디나 '포로수용소'가 세워지고 누구나 포로가 될 수 있다. 자유를 내걸고 당당한 '주인의 삶'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이웃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수용소가 세워지고 사람을 공물로 요구하는 미노타우로스가 살을 찌우고 있었던 셈이다.

레비는 자신의 참혹한 경험을 증언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 담긴 작가의 생각은 단순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거나 공감해 달라는 뜻이 아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 위해서다. 이것이 인간인가? 레비의 처절한 이 물음은 같은 고통을 직접 겪었든 겪지 않았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궁극의 문제다.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답한다. 이것이 인간일 수는 없다고. 이 답에 담긴 인간에 대한 작고 작은 희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겠다는 삶에의 의지가 되었고, 수용소 안의 삶을 견디게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흑의 시간을 버티게 한 것은 아무리 괴물이 거대해도 인간을 결코 동물이나 사물로 만들 수 없다는 신념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물음은 괴물의 힘 앞에서도 끝까지 '인간이고자' 하며, 인간의 파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증언이다.

레비는 인간이고자 함에 대해서도 말한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 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괴물을 향했던 역겨움과 끔찍함이 우리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인간을 경멸하고 파괴하는 괴물과 그 폭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제 막 우리 사회의 괴물들이 어떻게 제물을 강요하고 인간을 사물로 대했는가에 대해 증언이 시작되었다. 두렵도록 용기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이 증언들이 혹시 불편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침묵과 무관심을 넘어서 심지어 왜곡하는 것은 아닐까?

괴물은 혼자서 만들어지거나 군림하지 못한다. 미노타우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깊은 미궁에 감춰서 키우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돌아보니 괴물에게 있다는 그 잘난 능력과 탁월함에 현혹되어서 심지어 권위라는 왕관까지 씌웠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괴물인줄 몰랐다고, 왜 그 때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레비가 답한다. "저항이 부족했다고 포로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엘리트만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을 포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당시에 저항하지 않았냐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알량하게 숨겨진 우월의식의 표현일 뿐이다. 인간이고자 한다면 괴물을 거부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증언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한 번 '지옥'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 법조칼럼

#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소개합니다

박 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광주 고등·지방·가정법원과 광주변호사회 간에는 몇 해 전부터 시민을 위해 법정 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담은 공식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법정문화발전협의회'입니다.

법원은 이 모임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이해와 편의를 가장 최전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재판의 운영, 제도 개선, 편의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청취합니다.

변호사회는 소송 수행에 있어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받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적확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바라는 절차상, 실무상의 요청 사항을 듣고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회보나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모임은 매월 1회 변호사 회관과 법원 회의실을 번갈아 가며 마련되고 있으며, 바쁜 일정을 감안해 간소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점심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혹여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법관들과 변호사들 간의 사적인 만남이 극도로 자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법정문화발전협의회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편의를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주체인 사법부와 변호사회가 공식적이고 양성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창구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성격의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같이 매달 1회씩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필자는 지난 1년(2017년)간 이 모임에 참여했고, 법관들과 변호사들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협의회의 핵심적인 논의 사항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은 최근 변호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적극 수용해 소송 당사자 및 관계자가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재판 순서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재판정 밖에 '사건 진행 전자 현황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변호사회는 가사 재판과 관련, 가사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권 제한은 소송 당사자들과 변호사의 입장에서 충실한 변론이 제한이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몸이 불편한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정 내·외 오름막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법원 편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만 3년이 되어가는 이 모임의 성과는 거대 담론보다는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소소한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자주 논의하는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이 보일 때,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 일임에도 구회근 부장판사님을 비롯한 이형근, 최창훈, 임형태, 정영하, 김용규 판사님이 열린 마음으로 변호사회와 소통해 주셨고, 변호사회에서는 임선숙 부회장님, 장정희 공보이사님을 비롯한 노로, 김지현, 백준홍 변호사님이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최근 법원 인사가 결정되어 법원 쪽 구성원들이 광주 외로 다수 인사 발령을 받거나 새로운 보직에 보해졌으므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소통의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3기 협의회'로 불리게 될 이 모임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하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더 이 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될 필자로서는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과 변호사회는 이 같은 협의회 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 기 고

# 개혁 과제와 지방선거

김 대 현
위민연구원 원장

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남았다. 후보자들이 각 정당의 공천을 위해 경선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출마자들과 지지자들은 마치 수능을 앞둔 수험생처럼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반면 국민의 일상은 더없이 평온하기만 하다. 늘 상 그렇듯 정치의 계절은 출마자들과 지지자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현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진다는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자연스럽게 관심 밖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제 규모만 커졌을 뿐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선진국 반열. 그러나 성장에 대한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34개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꼴찌이다. 그 이면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두려울 만큼 자살률 세계 1위, 최저 출산율 1위, 노동환경 최하위 등 약 50여 개가 넘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력 범죄는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3배 이상 늘어났고 요즘 '미투'(me too)운동에서 드러나듯 여성의 사회 진출은 조직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사회는 시나브로 불안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1500조 원을 넘어 2000조 원을 내다보고 있다. 국민들은 빚을 내어 돌려막으며 버티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말이다.

이런 현상이 집약되어 폭발되었던 게 지난 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현재 당시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에 대한 울분에 정치권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 개혁, 검찰 개혁, 교육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등 법률로 가능한 제도들을 우리 국회는 단 하나의 법안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았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을 문제 삼으며 헌법을 고쳐(개헌)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나눠 가지려고만 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권리들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지난해 촛불 시민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의회 권력은 교체하지 못했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입법부인 국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만 한정지으며 봉합하기에 여념이 없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가능하게 했던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시기는 다가오고 선거라는 국면이 자칫 정치권에 면죄부를 주는 거 같아 우려스럽기만 하다. 혹자들은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느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선거는 그 외 모든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 한 정치권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쪽으로는 지방 분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지방을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혹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과 종속 관계로 설정하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벌써부터 전략 공천이나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지역의 자율권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물론 전략 공천의 본 의미는 정치 신인이나 청년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처럼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나 자신들의 계파를 형성하기 위한 줄세우기식의 전략 공천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개혁은 시기적으로 가장 힘 있을 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만들어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정치권이 놓쳐버린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되 개혁 과제들은 과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축제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하는 국민들을 탓할 게 아니라 정치를 코미디화하고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정치권이 먼저 반성할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곧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社 說

#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관리 엄정하게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후보 선출 때 1·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광주시장 경선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어느 선거구보다 후보들이 난립하고 과열 양상까지 보이면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일보 주최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에서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짐한 것은 의미가 깊다 하겠다.

민주당은 지난주 최고위원회를 열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경선 방법을 마련한다'는 당규를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관위는 1·2차 경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후보자가 너무 많은 광역단체의 경우 1차 예비 경선을 통해 2인이나 3인으로 압축해 2차 본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2단계 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무려 7명의 주자가 나선 광주시장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꼽고 있다.

각 후보 측은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2단계 경선을 도입할 경우 2차 본경선이 사실상 결선투표처럼 작동하면서 선두 주자와 후발 주자 간 또는 후발 주자들끼리 이합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섣불리 점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이런저런 잡음이 일었고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2차 경선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결선투표가 되어 후보 간 물밑 연대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공관위의 엄정한 경선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지방선거 D-100 '新다당제' 정립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는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판가름 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계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여야 각 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어야 할 판이다. 특히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돼 가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첫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뗀 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이 당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세 확장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느냐, 제대로 날개를 펴 보기도 전에 존립 기반이 무너지느냐, 이는 전적으로 이번 선거의 성적에 달려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한국당을 대체하는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명망 있는 인재를 영입하려 해도 선뜻 합류하려는 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민주평화당은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 덕분에 오히려 그동안 등을 돌렸던 호남 민심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이들 두 야당과 더불어 자유한국당까지도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를 100일 남겨둔 지금의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어느 정당이든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될 경우 그러한 선거 결과가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써 '신(新)다당제' 정립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無 等 鼓

### 출산율

2014년 오사카에서 어느 모녀(母女)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머니는 사망했고 딸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얼마 후 딸은 살인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의 증언대에 서게 된다. 중증 환자인 어머니를 10여 년간 간병해 온 딸이 동반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마이니치신문이 펴낸 책 '간병 살인'에 나오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비극적 사건은 2007~2014년 일본에서만 371건(미수 사건 포함)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그대로 '가족 붕괴'의 처참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간병 살인'을 남의 나라 먼 얘기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첫 40만 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그뿐 아니라 올해 초중고 120여 곳은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느는 것과 맞물려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8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내 자식만큼은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지도층의 취업 비리는 청년층들에게 박탈감만 안겨 준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를 수 없는,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불공정 사다리'를 먼저 걷어치워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이미 끊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출산율 제고의 묘책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
| 정치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 디자인실 220-0536 |
| 사회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 사회2부 220-0652 | 사진부 220-0693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